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

글 쓰는 순서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

여는 글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나 04

1장 한미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하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3-4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07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11

한미동맹 60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 17

2장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

미국의 전략적 중심지, 아시아태평양 24

TPP 추진 현황과 전망 29

조어도에서의 중일 국지전과 핵전쟁의 위협 34

3장 한미동맹과 박근혜 정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 39

핵보유를 향한 욕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44

한미연합전력의 재편과 군비증강 49

4장 지금 여기에서 평화운동을

한반도 비핵화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자 55

[부록] 현실 사회주의와 핵무장의 역사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61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난 60년에 걸친 분단과 냉전의 역사에서 항시 존재하던 재래식 군사적 충돌의 위험은 물론 핵전쟁의 가능성마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이지요(1-1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5월 초 첫 해외순방에 나섭니다. 한반도 위기 해법과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1-2절).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의 한 축을 이루는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지역적·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한 동맹으로 그 개념과 범주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1-3절). 이러한 한미동맹의 변화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차선책(플랜 B)으로 추진 중인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적극 조응하는 것입니다(2-1절).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

과 남한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습니다(2-2절).

이런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의 이동은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2-3절).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혈맹'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남한으로서는 어느덧 최대의 교역상대국이 된 중국과의 파트너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는 현재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의 최대 난제입니다(3-1절).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약속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선택지는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군사적 대결 과정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진전을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미국산 무기 도입과 같은 남한의 재래식 군비 증강과 핵억지력 제고(미국의 핵우산 공약 강화 및 남한의 미사일방어망(KAMD) 참여)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3-2절, 3-3절).

이러한 한미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사회운동은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 및 주둔 미군의 철수, 남한의 군비 증강 반대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의 일관된 요구로 채택해야 합니다(4-1절, 4-2절).

아무쪼록 이 소책자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평화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30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3-4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북한은 작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를 명분으로 로켓발사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보한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에 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남은 과제는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개량화 실험이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핵 경쟁의 악순환

이에 미국은 UN차원의 대북제제를 강화하고, 3-4월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확장억지 성격의 대북 무력시위를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폭격기 B-2, 핵잠수함 사이언이 동원된 것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 시도에 맞대응해 북에 대한 핵위협을 실

제화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한미국지도발대응계획’도 발효했습니다.

이에 북한도 3월 들어 대미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최고사령부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5일), 외무성의 ‘핵선제타격권 행사’ 발언(7일), 조평통의 ‘남북불가침합의 무효’ 선언(8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선언(27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강력한 핵 선제타격이 포함된다”),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30일) 등 일련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과 인공위성 제작발사국임을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우주개발법’). 그 후속조치로 2일에는 영변 핵시설 용도의 조절변경을 언급했는데, 이는 기존 핵시설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군비 경쟁의 비약적 상승

이번 국면에서 양측의 작용-반작용은 동아시아의 핵·군비 경쟁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우선,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과제로 추진 중인

‘태평양으로의 선회’ 전략이 이번 국면을 계기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미국은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온 MD 체제의 당위성을 이번 계기를 통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 무기 외에도 F-22 스텔스전폭기, SBX 레이더,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는 파격적 군사 조치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주축을 이루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비핵보유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재처리 시설을 공인받고 있으며 핵물질과 핵기술 두 측면에서 언제나 핵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빌미로 핵무장화와 ‘보통국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2011년 무기수출금지 3원칙 수정, 2012년 우주관련법 개정, 2013년 2월 ‘긴밀한 미일동맹이 완전히 부활했다’ 선언, 3월 TPP 참가 결정, 4월 주일미군 재편 협정 마무리).

남한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핵억지력 제고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재래전 중심의 군비경쟁 논리나 억제 방어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 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우산 등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

고 있는 것이지요.

한술 더 떠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이 이러한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는,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해서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 측의 공약과 양해를 얻어내는 기제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서 남한이 동맹국과의 조정·합의를 거쳐 핵연료 생산 및 재처리 공정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유연하고 다양한 핵 억제 전략을 구사할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오히려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와 이에 대한 한미양국의 대응은 위기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핵 경쟁의 악순환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미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무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맞대응을 불러 동아시아 전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가 결코 한반도 위기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박근혜 대통령이 5월 7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양 정상은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대북 억제력 유지 등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현재의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하지요. 또 동북아 평화 협력 증진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적 공조와 대북 정책 조율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어떤 대북 정책을 제시할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회담 의제가 구

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기본 노선과 최근 3-4월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개요



3-4월 ‘치킨 게임’을 방불케 한 한미연합전력 대 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4월 중순 들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4월 말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월 말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고 5월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국면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양측이 ‘밑당’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당장 전환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993년부터 20년간 반복된 북미 간 핵 대결·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핵 공갈과 그에 따른 갈취의 악순환만 조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은근한 무시’와 ‘전략적 인내’ 정책기조에 반영되는데,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시키기 전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군사적 대치 국면을 거치며 미국 정부 안에서 ‘전략적 비인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실상 중국을 대북정책의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 책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대화나 협상보다는 제재와 한미일 3각동맹의 군사적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동맹국의 미사일방어방(MD) 참여 ▲한일정보협정 체결 ▲한일 양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침단무기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한미 양국간의 군사적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사전 협상에서 북핵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재래식 고도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역지력, 즉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킬 체인'(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조기 구축 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제들은 기존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함께 신설된 확장역지정책위원회에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 한미동맹 간 지휘구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념에 관한 논의가 정상회담 전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물론 정상회담의 결과도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대화를 제안하고 속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미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할 때 설령 대화와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미 경제적·군사적 동맹 강화

그럼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9년 이명박-오바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동북아와 세계로 확대하고 동맹의 이슈를 군사·안보에서 경제·문화 등으로 확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남한이 금융위기·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적·지역적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적극 포섭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미국은 2011년 '태평양으로의 선회'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은 미중 관계(G2)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동맹(G3)을 강화하는 이중노선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부각되는 것이 바로 한미FTA를 모형으로 삼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대외전략은 미국의 군사전략에도 반영되어 아시아에 대한 재관여·재균형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지요. 북한의 핵무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TPP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환태평양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일본에 이어 남한에게도 참여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한의 TPP 참여가 정식 의제로 다뤄질지, 다뤄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의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지만, 한미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조만간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협상 참여를 적극 중용할 가능성이

습니다.

군사동맹과 자유무역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가

그러나 한미의 ‘포괄적 전략 동맹’은 오늘날 한반도 위기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미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무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는 중국의 맞대응을 불러 동아시아 전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합니다.

사회운동은 박근혜 정부의 방미에 즈음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은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전쟁과 착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한미동맹 60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

주한미국대사관에는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 2013, 60년 번영의 동반자’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60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또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림2] 주한미국대사관 외벽



▲ 주한미국대사관 외벽에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 2013, 60년 번영의 동반자’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오늘날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회담이 열릴 당시 이승만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이 “나라를 자살행위에 몰아넣을 만큼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광신도”라고 우려했지만, 동시에 “나라 전체를 공산주의와 싸울 결의에 눈뜨게 하였고, 아시아 최대의 강력한 반공기지로서 미국이 잃어서는 안 될 상대다”라며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지원을 통해 ‘실지회복’을 추구했던 이승만의 이해와, 동아시아에서 냉전을 지속하면서도 남한의 단독 군사행동을 우려한 미국의 이해가 절충된 결과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란 결국 냉전 하 남북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주한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남한의 특수한 의존과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해서 남한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중국과 소련이 개입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한국’을 방어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조약이 언제 어떻게 갱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갱신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조약은 거의 영구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약은 1953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공론의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조약은 미군의 주둔 목적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미군 주둔에 사실상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군 병력과 무기의 증강·감축·철수 문제를 미국이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나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전폭기를 들여오는 것이나, 미국이 한반도를 지역 차원의 전초기지로 삼는 것도 자기 마음에 달린 일인 것이지요.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60년 동안 줄곧 한반도 위기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한편 한미‘동맹’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조약의 특이한 점은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 어떤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승만 이후 남한의 역대 정권은 미국의 대규모 지상배치 병력의 유지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미

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여 유사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나아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약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론과 한미동맹의 호전성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행동에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호전적인 전략 모형을 계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전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은 남한 정부의 호전적인 군사주의와 상호 보완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됩니다.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론과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호전적이고 공세적으로 재편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베트남전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미국 닉슨 정부는 1971년 “전쟁발발 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 한다”는 요지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함께 동맹국에 대한 무상군사원조를 대외군사판매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론’을 제창하며 자체 전력증강과 군수산업 발전에 매진하는 한편 비밀리에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1974년부터는 미국과 함께 ‘작전 계획 5027’을 수립하면서 주한미군 작전개념을 사실상 복침 시

나리오에 다름 아닌 ‘진진적 방어전략’으로 대체했습니다.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재편

탈냉전 이후 미국 (아버지)부시 정부는 레이건 정부의 ‘2차 냉전’이나 ‘두 개의 중국’ 노선과 단절하며 탈냉전 시대 동아시아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클린턴 정부가 탈냉전 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완성했는데,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과 ‘교류’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한 (아들)부시 정부 1기에는 신보수주의적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중시정책으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주둔 미군 전력의 재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반면 부시 정부 2기에는 신자유주의적 국무부가 중심이 되어 주요 2개국(G2) 구상에 따라 2005년 미중전략대화를 시작하고 2006년에는 전략경제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역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철저히 조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아버지)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에 상응하여 1990년과 1992년에 각각 소련, 중국과 국교를 체결하고,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

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도 각각 클린턴 정부와 (아들) 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연관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편으로는 남한 자본이 주도하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재편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형태의 긴장을 형성하는 모순을 내포하였습니다. 또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연계된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경제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부시 정부의 '예방전쟁의 교리'와 수렴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

그 결과 한미동맹 50주년이던 2003년에 한미양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모형이 된 미국의 신군사전략은 군사력을 기동화·침단화·경량화하고 이를 위해 미군기지를 핵심(Hub) 기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략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며 한미FTA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개최된 2009년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합의하였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에서 동북아와 세계로 확대하고 동맹의 이슈를 군사·안보에서 경제·문화 등으

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013년 5월 박근혜-오마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태평양으로의 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거쳐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의 완성을 꿈꾸는 한편, 북한 핵을 빌미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중심지, 아시아태평양

미국의 태평양 세기

지난 연말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태국, 버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왜 유럽이 아닌 동남아시아가 첫 해외 순방지가 되었을까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외 정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2011년 11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글을 <포린폴리시>에 기고하면서 이러한 방향이 대외적으로 공표됩니다.

태평양정책이 포괄하는 지역은 매우 넓습니다.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의 글에서 언급된 국가는 일본과 남한,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호주 등인데요, 미국을 포함해 생각하면 캘리포니아-하와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이 다른 지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포위하게 되는 셈입니다.

경제위기와 아시아태평양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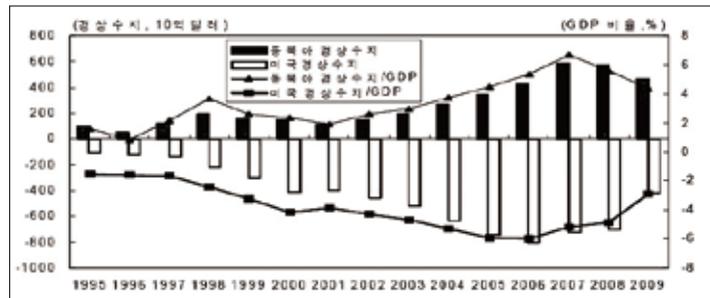
미국이 태평양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동아시아의 수출달러환류를 통해 이중적자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즉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이 대미수출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이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결국 2007-2009년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됩니다.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였고, 수량완화정책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재 미국인들의 주요한 정치적 관심사는 경제위기 극복,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자 축소입니다. 이 문제들과 긴밀히 연관된 것이 바로 무역적자 및 대외부채 축소를 목표로 하는 통상정책인데요, 따라서 대미무역 흑자국이 많고, 시장규모가 큰 아시아태평양 지

역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선 아태지역 최대의 대미무역 흑자국인 중국의 위안화를 절상시켜 부채도 줄이고,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여 넓은 시장과 잠재력을 지닌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위안화 절상 요구가 일정 관철되어, 미국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됩니다. 중국의 국민소득 대비 무역흑자비중은 2007년 10%에서 2009년 5%, 2011년에는 3%로 급락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무역적자비중은 2006년 6%에 도달하고 2009년에는 3%로 급락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3] 동북아시아와 미국의 경상수지 및 對GDP 비율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한중FTA의외와 주요 쟁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규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 21개국은 2009년 기준으로 세계무역의 43%, 세계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과 APEC 회원국 간 상품 무역규모는 2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렇게 거대한 경제규모가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창설에 주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에 참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TPP 참여를 선언합니다. 본래 한중일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를 상대화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주도력을 미국이 발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2-2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정책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군사정책 역시 변화합니다. 미국은 중국·북한·이란 등이 서해·남중국해·인도양·페르시아만(걸프만) 등에서 미군의 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월에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국방전략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재정적자 때문에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지상군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의 해·공군력은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일본, 한국, 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동맹국과 대중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해·공군 중심의 '해상공중전' 개념은 기존의 육·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지상공중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국방전략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작전수행에 맞춰 전면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요. 경제·군사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선언은 미중 간의 잠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TPP 추진 현황과 전망

TPP 추진 현황

작년 말에 일본도 한국처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민당 아베 총리의 우경적 행보로 한국에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지난 3월에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도 TPP 참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TPP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일환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협상범위가 매우 넓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2003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협상을 시작하였고, 2005년 브루나이가 참여하여 2006년 4개국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4개국은 APEC 회원국에게 추가 참여를 요청하였고, 2010년 3월부터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도 협상에 합류하여

공식명칭도 P4에서 TPP로 변화합니다. 2010년 10월에는 말레이시아, 2012년 12월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추가되어 현재는 11개국이 협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연말까지 TPP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민감품목의 예외 취급 방식, 관세철폐 원칙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원산지 규정,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협상국으로 추가되면, 협상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림4] 동북아시아와 미국의 경상수지 및 對GDP 비율



출처: 한국경제신문

미국의 TPP 추진 배경

미국은 FTAAP를 달성하는 경로로 TPP를 가장 중요하게 사고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TPP 참여를 선언 하면서, TPP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추진하여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협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TPP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본래 한국보다 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일본이 입장을 바꿔 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추진 동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이 TPP를 추진하는 배경은 앞 절에서 지적했듯, 경제위기 이후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FTA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다른 국가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지요.

TPP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큼니다. 미국이 기대하듯이 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 기능할 경우, TPP는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미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인 한미 FTA를 TPP의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중에 가입하는 나라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TPP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의 규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입니다.

한국도 TPP에 참여해야 할까?

중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아시아 역내 무역협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TPP가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에 차질을 가져온다고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ASEAN과의 FTA를 심화,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중일 FTA를 가속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한국은 그간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상을 바탕으로 양자간 FTA를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논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TPP의 모형이 되어있는 마당에 미국 중심의 무역질서 재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한국이 TPP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수출자유규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전면 개방

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는 한국에서 국부유출과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하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며, 수출·재벌 주도의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등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TPP 참여 선언으로 TPP의 중국 견제 성격이 더욱 선명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더욱 깊이 휘말려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조어도에서의 중일 국지전과 핵전쟁의 위험

조어도 분쟁의 원인과 경과

동중국해에 위치한 조어도(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는 오키나와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895년에 조어도를 오키나와현에 편입시켰습니다. 2차 세계전쟁 이후 일본은 오키나와를 미군에 이양했다가 1972년 다시 반환 받으면서 조어도 역시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해 조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확인되고 대만과 일본 각국이 설정한 석유개발범위가 겹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어도 영유권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식민지 반환 문제를 논의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조어도에 대해 명시적 결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일본이 청

일전쟁 후 대만과 함께 조어도를 일본 영토에 강제로 편입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무주지로서 오키나와현에 정당하게 편입했다는 입장입니다.

1970년대 중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와 평화우호조약을 통해 ‘논쟁보류, 공동개발’ 원칙을 합의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밀월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특히 군사력 증강 움직임으로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불신과 반발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2010년 일본이 조어도 주변에서 중국 선원을 체포, 구류하면서 갈등이 증가했고 조어도 문제도 다시 부각됩니다. 양국 간 군사력 경쟁, 경제적 보복 조치 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조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어도 분쟁으로 인한 미일동맹의 강화는 다시 중국의 군사적 대응력 강화를 부르고,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들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조어도 영유권 문제는 중일 양국 간 정치·안보 갈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2012년 9월 일본의 조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에서는 최대 규모의 전국적 반일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012년 11월 대규모 미일 합동군사훈련 추진과정에 중국의 기습적 섬 점령에 대비한 ‘센카쿠 탈환작전’ 훈련도 포함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섬 탈환훈련은 빠졌으나, 군사도발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진행

하는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일본의 낙도 탈환훈련에 일본은 그 간 육군만 파견해왔으나 이번 2013년 합동훈련에는 일본 육해공군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림5] 2012년 조어도 분쟁 당시 미국함모전단현황



조어도의 국지전 계획이 가지는 핵전쟁의 위험성

이러한 조어도의 영유권 갈등은 핵전쟁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위대가 조어도에서 국지전 해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일본은 6척의 미사일 구축함과 1척의 헬기 구축함이 피해를 보는 반면, 중국은 동해함대와 북해함대가 작전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군부는 이에 반발하면서 해군 뿐 아니라 공군, 제2포병의 입체적 작전이 가능하고, 자신들은 핵무기 보유로 인해 불패를 보증하는 카드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국지전의 승리를 목표로 중국 스스로 핵 전략을 공격적으로 진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과 구분되는 핵무기 전담부대로 제2포병 부대가 1966년에 창설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명시적 핵전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단지 '최소 보복수단' 수준으로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핵보유가 소규모이고 매우 취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핵보유고가 강화되고 덜 위협적인 안보환경이 조성되면서 중국은 2006년 공식적 핵전략으로 '자위방어적 핵전략' 개념을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핵억지라는 개념이 포함되는데 '다른 국가가 중국에 대해 핵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억지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전략방침도 초점이 이동합니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현대적 정보통신체계, 우주기술, 고급 작전 등이 통

합된 하이테크 국지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국의 주요 전략방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래식 국지전에서 제2포병이 갖는 역할이 필요했고, 핵 억지력과 재래식 타격 능력을 결합하는 중국 고유의 이중적 억지개념이 형성됩니다. 중국은 적국이 제2포병에 반격을 가하는 것은 곧 핵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므로 함부로 반격할 수 없을 것인 반면 제2포병은 마음껏 재래식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패의 카드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방어 능력을 지니지 못하는 미사일은 그 성격상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며 적국과 대치할 때 '사용될 것이냐, 파괴될 것이냐'라는 곤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재래식 미사일로 적국을 선제공격하면, 상대국은 중국의 지휘통제 체계와 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은 중국의 핵미사일 부대가 남게 된다면 남은 핵미사일을 적국을 향해 발사하려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재래식 미사일과 핵 미사일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이 상호 핵공격을 억지하기보다는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갈등은 이런 예상치 못할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는 아시아태평양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심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주축으로 합니다. 이런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의 이동은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경제적으로 볼 때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과 한국을 참여시켜 향후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TPP 구상이 자국에 대한 견제라고 이해하며, 이에 대응해 한중일 FTA를 발판 삼아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3월 이미 TPP 가입을 공식 선언했고, 한국도



이미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TPP 가입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안보적으로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양국이 직접 대치하는 모양새가 형성되어 있고, 또 센카쿠/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 미국이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핵 위협을 빌미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반도 주변, 다시 말해서 중국의 코 앞에 전략무기와 첨단무기를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미사일방어망 참여도 중국과의 긴장을 심화하는 요인입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위

이처럼 경제적으로나 군사·안보적으로나 미중 간 갈등의 한

복판에는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균형외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위 아래서 중국과의 적절한 관계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혈맹관계’인 미국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최대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눈치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처했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이슬이슬한 줄타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미국의 시도에 적극 호응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논란이 되었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시도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대국들 사이의 ‘최전선 바둑돌’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날로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에서 작전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쟁사령부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북한의 로켓 발사 시험과 올 2월 3차 핵실험 이후 이런 시도는 더욱 노골화되

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층 공격적 성격을 더해가는 한미동맹은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고,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점차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동시에 한미동맹이 심화·발전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줄타기가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균형외교는 대안이 아니다

TPP와 한중일 FTA, 한미일 삼각동맹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군비증강, 영토분쟁에 대한 미중 양국의 영향력 행사, 위안화 절상 등 경제위기 해법, 여기에 중국 내 인권, 소수민족 탄압 등 전통적인 갈등 요인까지 더해져 미중 갈등은 점차 심화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진정한 균형외교가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자주국방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대미의존도를 낮추고 중국과의 관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에 기초해 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시절 '선제 타격능력의 강화'를 강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추진되었고, 한국군을 기동화·첨단화하는 '자주국방'은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제로

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술 더 떠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소홀했고, 이명박 정부는 중국에 소홀했으므로, 박근혜 정부가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훨씬 더 심각한 사실 왜곡일 것입니다. 한국이 중재자, 균형자,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줄기차게 강조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안보적으로나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위는 일관되게 강화되어왔고, 그것이 미중 간 갈등의 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점차 한국 정부의 모순의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균형외교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의 힘 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또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과 최종 타결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TPP 참여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영토 분쟁과 맞물려 미일동맹 강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한국의 TPP 참여를 둘러싼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반면 노동자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FTA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노동자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며,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와 반전반핵 평화운동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핵보유를 향한 욕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한국도 핵무장하자?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불을 지핀 것은 새누리당의 정몽준·원유철 등 일부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 핵실험 직후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들의 주장이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고 공식 부인합니다. 문제는 핵무장에 대한 국민 정서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설문에 찬성 의견(64%)이 반대(28%)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의 배경에 도사린 논리를 간파해야 합니다. 첫째, ‘공포의 균형’, 즉 핵무기를 사용하고

자 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보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상호 궤멸’에 대한 공포 탓에 결코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둘째,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게 될 핵우산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핵무장 또는 핵무장을 위한 논의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마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1973년 발효되어 2014년 만료될 예정인, 핵발전 연료



의 이용에 관해 한국과 미국이 맺은 협정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으로 핵발전소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분열성 물질이나 기술을 유입하거나 유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죠.

최근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초기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는데,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강경해, 농축과 재처리 금지를 골자로 한 핵 비확산 정책에서 한국을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4월 16~18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협정 시한 2년 연장'이라는 타협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일단 갈등을 잠시 뒤로 미룬 것이지요.

이에 대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사설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이며, '자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에너지 주권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모범국인 한국을 북한과 같이 취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 때 정치적 담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는 핵산업계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핵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양은 극히 한정적이라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핵연료의 재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2006년 말 기준으로 7,960톤의 사용 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이 핵발전소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폐연료봉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어떤 나라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격리 보관할 뿐입니다. 따라서 핵발전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더라도 폐연료봉의 처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처리 과정은 사용한 연료봉에서 핵발전에 이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물질을 분리해내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연료봉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분리,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라늄 농축 역시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지요. 미국이 핵 비확산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핵보유국, 그리고 핵 비보유국 중에서는 일본에게만 예외를 두는 미국의 이중기준은 분명 문제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핵군축이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이 될 수는 없겠지요. 사실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경계는 모

호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하는 순간, 한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북한과 같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약속으로도 미덥지 못해 한국이 직접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핵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운운하며 핵발전소를 늘리고 게다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는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한미연합전력의 재편과 군비증강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조응하여 미국의 군사전략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력 증강에 따라 제해권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의 함대 및 전력 투사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영역 내 기지들을 무력화하는 단계, 즉 ‘접근 저지/영역 거부’(Anti 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해·공 합동군의 ‘합동작전접근개념’, 즉 해상·공중전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2차 세계전쟁 이래 지상·공중전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 미국의 주력군이 육·공군에서 해·공군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재편

이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의 재편 및 강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도 실제로는 이런 맥

략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GPR)의 일환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실체는 지상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군과 공군을 한국이 작전통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여 평택기지에 신설되는 미국의 한국사령부는 진주만의 태평양사령부에서 독립한 일곱 번째 지역사령부가 됩니다. 한국사령부는 평택의 8군과 함께 오산의 7공군, 항공모함이 배치된 요코스카의 7함대의 작전도 통제합니다.

평택-도쿄-괌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 직접적으로는 북한, 잠재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규모 미군 부대가 동아시아에 영구히 주둔하는 것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형 무기 도입과 같은 군비 증강 계획 역시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문제점

지난 4월 외교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황준국 장관 특별보좌관을 전담대사로 발령했습니다. 2008년부터 적용되어 온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9차 방위비분담특별

협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증액이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체 비용의 42%를 분담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으로 미 국방부는 7,000억 달러의 국방비 중 올해에만 46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합니다. 국방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군비를 축소할 생각이 없는 미국은 동맹국에 그 부담을 떠넘길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동맹 간의 공평한 비용 분담을 주장하지만, 토지 임대와 각종 세금, 공공요금을 면제해주는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한국 측이 더욱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에서 올해 8,695억 원으로 8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5배 정도 확대된 국방비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평균 18.2%가 이월되어서 실제 소요 경비에 비해 과다 산정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의 논란과 문제점

작년 말 차기 정부로 연기된 차기전투기 사업(FX), 대형공격헬기 사업(AHX) 등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할 차기전투기 사업에는 8조 3000억 원을, 북한의 공기부양정과 전차에 대응할 무기체계인 대형공격헬기 사업에는 1조 8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AH-64E)과 터키 TAI사의 망구스타(T-129)가 경쟁했습니다. 비싼 가격이 문제였던 아파치 가디언이 가격 협상과정에서 사업비를 충족시키면서 낙점되어 36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꾀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F-15K 도입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미국 군수회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형공격헬기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창군 이래 최대 사업인 차기전투기 사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라이트닝 II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경쟁 중입니다. F-35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기체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가격을 올려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반면 유로파이터는 대규모 기술이전과 국내 조립 등 경제적 관점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향후 무엇이 차세대전투기로 결정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과거 전례를 보면 가격이나 성능과 무관하게 미국산 무기가 선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한미동맹을 고려한 미국산 무기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하던 이유입니다.

이상은 한미 간의 무기 거래가 최소한 '상도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이러한 군비 증강이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계속 심화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국방부가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적극적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도발원점까지 타격한다는 공세적 개념입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한반도에서 전면 군사충돌도 불사하는 위협천만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재래식 무기 전력이나 한미합동 핵억지력 모든 측면에서 북한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재편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하고, 미국산 대형무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 연합전력의 군비증강을 막아내고 나아가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을 철수를 요구하는 평화운동을 적극 펼쳐냅시다.

한반도 비핵화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자

남한에는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적 시각

하나는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괴뢰정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비난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북한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하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한반도 전쟁 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동아시아에서의 역관계를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 있는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켜왔

다는 역사적 배경을 고의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북제제와 군사적 압박이 북한 군비증강의 핵심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관념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그런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압도적인 군사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무장, 즉 핵무장의 유혹을 강화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유발해 온 외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대북 선제 핵공격 옵션을 유지해온 반면, 탈냉전 이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핵우산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대북 경제 봉쇄·제제가 지속되어왔고, 북한에 비해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첨단 재래식 무기 도입보다는 핵무기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비대칭적 역관계 속에서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증강(수직적 확산)은 규제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수평적 확산)만 규제하는 핵비확산조약(NPT)의 이중잣대를 따르라는 것을 북한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했습니다.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시각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 또는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북한의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 시도를 옹호하거나, 핵보유가 대미 협상용 지렛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북핵무장은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이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가 장기간에 걸친 북미 간 대결 구도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이 입장은 한반도 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역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진정 진보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째, 현실적으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미국과의 일괄타결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핵위협이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남한에게 핵·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하여 북한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딜레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주변국의 보수적·호전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진보적 평화운동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협상수단 또는 자위수단이라며 지지·옹호하는 태도는 평화운동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2012년 새로 개정된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북한은 당초 공언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일괄타결이나 전면전이나 양극단 사이의 선택을 촉구하는 북한의 핵대결 논리는 처음부터 한반도와 주변국 민중을 불모로 한 '거대한 도박'이었고 그 판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역효과 중 하나로 남한에서는 북핵 억지력의 현실적 대안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나 남한의 독자 핵무장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사회운동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확고히 하지 않을 경우 평화운동의 대중

적 확장은 고사하고 대중적 토대마저 유실할 위험이 큼니다. 남한의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방어적·수세적 관점을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시도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가 북미 간의 일시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일정한 타협이 도출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력,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는 근본적으로 침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핵경쟁 또는 전쟁위기의 근본적 유발요인인 주둔미군의 철수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해체를 지향하는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북미 간의 대화나 협상이 갖는 제한적 의미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핵무기는 인류의 적이다

우리는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은 무의미하며, 핵무기 그 자체가 전쟁의 억지 요인이 아니라 유발 요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 전략가들은 상대방의 핵 선제공격에 대해 핵으로 보복공격을 단행하는 상호확증파괴(MAD)를 통해 핵전쟁을 합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공포의 균형'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 또는 현실성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오류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합니다. 전쟁은 예상불가능하고 예측불가능한 위협, 하지만 그 대가가 인류전체의 절멸인 위협이기 때문에, 그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의 위협에 대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강조하건대, 북한 핵이 아니라 평화운동이 평화를 보증합니다. 남한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의 일관된 요구로 채택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 및 주둔 미군의 철수, 남한의 군비 증강 반대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부록]

현실 사회주의와 핵무장의 역사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핵억지력은 국가 간 체계의 논리 속에서 작동하는데, 핵무기는 국가 간 체계의 논리를 매우 강하게 부과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 개입의 여지를 배제하는 특징을 갖는다.

과거 냉전과 핵억지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냉전이 보여주듯 ‘상시화된 전쟁’은 전쟁을 대중적 정치의 통제력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 정치를 전쟁과 국가 간 체계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핵무기에 대한 대중적 통제라는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될 수 없었다. 북한 핵실험이 보여주는 문제의 근원에도 같은 쟁점이 놓여 있다.

1970년대 유럽에 퍼싱II 미사일 배치를 둘러싸고 등장한 유럽의 핵무기 반대 평화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두드러진 것은 당시 유럽 공산당들의 모호한 태도였다. 이는 사회주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핵무기 반대 운동과 결합되지 못한 역사를 되풀이해 보여준 것이었다. 유럽 공산당의 모호한 태도는 소련의 핵보유와 관련된 문제였다. 소련은 미국 제국주의의 침공 위협에 대한 생존의 논리로서 핵보유를 정당화했다. 소련의 핵보유는 방어적이고 생존적인 것이라는 논리는

자기합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논리였다.

소련의 핵보유는 사실 2차 대전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된 문제다. 미국의 핵개발은 나치의 핵개발 철폐에 대한 대응으로 개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절대적 평화주의자'이던 아인슈타인이 나치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개발을 촉구하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서명한 사실은 그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독일 패전 후 미국은 대일전의 조기 종전을 위해 각각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원료로 제조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고, 2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였다. 핵무기의 등장과 그 실전 사용은 사실 전쟁의 종료인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파멸적 전쟁의 개시와 무기 확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인구밀집지역에 원폭을 투하한 것은 민간인 대량학살을 초래한 전쟁범죄 행위였지만, 과시즘에 반대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2차 대전의 공식적 정리방식이 이 쟁점을 덮어버렸다.

2차 대전 종전 후 핵무장과 핵무기에 대한 반대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련의 핵무장이었다. 소련은 1949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미국 핵보유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 핵무장을 정당화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핵폭격 위협에 노출된 중국 또한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중소분쟁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핵보유의 논리를 더욱 정당화하여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여기서 모두 핵보유는 '국가생존'의 차원에서 정당화되었으며,

소련의 핵보유는 소련이나 소련 외부에서 모두 사회주의 운동이 핵무장에 반대하는 싸움을 전제할 수 없는 자기무력화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조국을 방위'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파괴적이었다. 핵보유는 결국 국가 간 체계의 논리를 사회주의 국가들에 깊숙이 내장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동했으며, 국가권력의 논리가 대중보다 우위에 서는 결과를 낳았다.

즉, 문제는 핵보유가 대중운동을 희생하는 대가로 국가를 생존시키고 국제주의를 억압하는 계기이자 논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국가권력의 지속성을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더라도 운동을 소생시키고 국제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봉쇄되었다. 세력의 비대칭성을 운동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체계의 동학을 통해 세력균형의 틀 속에 들어감으로써 좀 더 쉽게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커졌던 것이다.

'차르 봄바'라는 최대 수소폭탄 실험은 핵보유를 통해 사회주의를 유지한다는 소련의 역설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15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흐루시초프의 선언은 핵무기 개발에서도 나타나, 1961년 지금까지 최대의 위력을 지닌 수소폭탄 개발을 개시해 10월 30일 미츠키카 만 핵실험장에서 공중투하 방식의 핵실험을 시행하였다. 그 위력은 50메가톤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15킬로톤이었으니 그보다 3천배 이상의 위력을 지녔다. 미국이 실제 실험한 수소폭탄은 15메가톤 규모였다. 차르 봄바는 무게 27톤에, 길이

8미터 직경 2미터의 어마어마한 괴물이었고, 투하 후 발생한 버섯구름이 직경 40km 높이 64km에 이르렀고, 4천 미터 상공에서 폭발하였음에도 지상에서 폭발의 화구만 반경 7km를 넘게 남겼고,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리는 반경만 25km였으며, 100km 밖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보였다.

그리고 25년 후 체르노빌에서 노심용해의 대참사가 발생했고, 그 후 5년이 지나서 사회주의 소련은 붕괴했다. 차르 봄바도 소련 사회주의를 지켜주지는 못했던 것이다.